

안중근의 평화사상과 칸트: 칸트 『영원평화론』으로 조명하는 안중근 평화사상의 보편 가능성

장 훈 ■ 중앙대학교*

〈국문요약〉

본 논문은 안중근-칸트 평화론의 비교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안중근 평화사상의 지평을 넓히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첫째, 최근 안중근-칸트 평화론 비교연구들은 두 사상가의 평화연방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이는 절반의 비교에 불과하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우선 칸트의 평화연방제가 국가들의 자유로운 연방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안중근의 동양평양회의는 일정한 권위를 전제로 하는 연방제라는 차별성을 갖는다.

둘째, 기존의 안중근-칸트 평화론의 비교연구에서 중대하게 간과되고 있는 초점은 연방제의 윤리적, 법적 전제로서의 개별국가의 주권에 대한 존중과 국가간 불간섭의 원칙이다. 20세기 후반에 칸트 평화론의 유행을 주도한 민주평화론자들이나 안중근-칸트 비교론자들은 공통적으로 평화연방제의 기반으로서의 국가의 주권과 국가들의 행동윤리로서의 불간섭 원칙을 외면하여왔다. 하지만 안중근과 칸트는 공통적으로 평화연방제의 논리적 전제이자 결과는 바로 주권과 불간섭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음을 본 논문은 밝히고 있다.

*주제어: 안중근, 칸트, 평화연방제, 주권, 불간섭원칙

I. 들어가는 말

안중근은 실천가이자 사상가였다. 1909년 일제 침략의 핵심 인물인 이토 히

*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E-mail: hjaung@gmail.com)

로부미를 하얼빈에서 저격한 자주 독립의 실천가였고 순국 직전까지 『안응칠 자서전』과 『동양평화론』 등의 저작을 통해 전쟁과 평화의 본질을 고뇌하고 평화체제를 구상했던 평화 사상가였다. 일제 침략에 저항한 실천가로서의 안중근 의사의 의거와 폭넓은 영향 등에 대해서 방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온 바와 같이, 안중근의 사상에 대해서도 실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¹⁾

최근 들어 안중근 사상연구는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한국의 독립운동사, 민족주의 연구의 흐름 안에서 진행되던 안중근 사상 연구는 지난 10여년 사이 급격하게 『동양평화론』을 중심으로 한 평화사상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²⁾(신운용 2009; 조광 2020; 현광호 2013) 『동양평화론』에 담겨 있는 안중근 평화사상에 대한 연구 관심이 급증하는 데에는 21세기 현실세계의 변동이라는 측면과 안중근 사상연구의 확장과 심화라는 이론 축적의 측면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

먼저 현실적 측면을 보자면 1990년대 냉전 붕괴 이후 한동안 세계질서와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낙관적으로 파악하던 분위기는 2010년대 이후 비관과 우려의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중국의 경제, 정치적 부상과 그에 따른 미-중 갈등의 고조, 북한 핵 위기의 심화와 일본의 군사 안보 역할 확대 추구라는 흐름들은 동아시아에서 군사 충돌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평화가 위협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Anastassova-Cornelis & Putten 2016; Fröhlich & Loewen 2017; Kang 2017). 이에 따라 국내외 이론가들에게 동아시아라는 맥락 안에서 평화구상, 평화사상의 단초를 모색하는 이론적 동기는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런 관점에서 동아시아 주요 강국들이 연이은 전쟁(1984-5년 청일전쟁, 1904-5년 러일전쟁)과 충돌로 얼룩지던 20세기 초에 평화라는 궁극의 목표를 지향하면서 구체적 평화안을 제출했던 안중근의 평화 사상을 새롭게 조명하는 것은 평화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모색하는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안중근 평화사상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늘어난 또 다른 이유는 안중근 연구의 축적과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안중근 연구자들 사이에서 최근 들어 안중근의 실천과 사상을 일국사의 관점에서 한국 민족주의, 항일 독립

-
- 1) 안중근 연구는 독립운동사에서의 위상과 민족주의론 뿐만 아니라 교육론, 가톨릭과의 관계, 문화론, 그리고 동양평화론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수행되고 있다. 안중근 연구경향을 분석하는 논문으로는 조광(2020), 신운용(2009), 현광호(2013) 등을 꼽을 수 있다.
 - 2) 2009-2019년 사이의 안중근 연구 동향을 조사한 조광(2020, 19)의 분석에 따르면 이 기간의 안중근 관련연구 결과물 150편 가운데 『동양평화론』 관련연구는 33편으로 가장 열띤 연구의 대상으로 떠올라 있다.

운동의 틀에 한정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는 반성들이 연이어 제기되어 왔다(강동국 2009; 김정일 2009). 1990년대의 민주화와 세계화 이후 역사학과 사회과학에서 민족, 민족주의라는 개념 틀의 억압적, 폐쇄적 성격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진 영향 아래(권혁범 2014; 임지현 2020) 안중근의 실천과 사상을 민족주의와 일국사의 한계를 넘어 동아시아라는 지역 더 나아가 인류의 전쟁과 평화라는 보편적 문제의식에서 조명해야 한다는 반성과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평화사상으로서 안중근 사상의 보편 가능성이 모색되기 시작하면서 가장 활기를 띠는 분야의 하나는 근대 서구 평화사상의 한 절정이었던 칸트 평화사상과의 비교 분석이다. 18세기 후반 유럽 계몽주의와 관념철학의 정점으로 이해되는 칸트 평화사상이 안중근 평화사상의 보편적 확장 가능성에 소환되는 이유는 합리적이다. 첫째, 칸트의 『영원평화론』(1795)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2018)은 무정부 상태가 지배하고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국제관계에서의 평화란 독립적 국가들의 연방제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구상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놀라울 정도의 수렴이 드러난다. 1790년대에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던 유럽 국제체제 내의 강국이었던 프로이센에서 제시된 대표적 평화 연방제론으로서의 칸트 『영원평화론』³⁾과 제국주의 침략의 고통을 이중으로 겪은 동아시아에서 제시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갖는 평화 연방제 구상의 수렴은 이들의 입체적 비교를 자극하기에 충분한 근거이다.

둘째, 냉전의 종식과 더불어 1990년대 서구의 국제정치학에서 세계평화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압도적이었을 때 이러한 전망은 이른바 민주평화론이라는 명제로 구체화되면서 국제정치연구의 한 주류를 형성하였다. 이때 민주평화론의 정당화에 동원된 것이 칸트의 평화사상이었다. 평화연방제는 공화국들의 자유로운 연합으로 가능하다는 칸트의 언명은 민주평화론자들에 의해서 민주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명제로 단순화되었다. 냉전 이후 서구의 역사적 승리감에 힘입어 민주평화론자들은 아직 민주화가 이뤄지지 않은 비민주 국가들을 민주화시키고 국제체제에 편입시킨다면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이데올로기로 나아갔다. 심지어 민주평화론은 서구가 주도하는 비민주국가들에 대한 개입정책과 그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으로 확장되면서 이론과 실천 양면에서 거대한 찬반 논쟁을 낳았다⁴⁾(이혜정 2008; Cavallar 2020; Fox & Roth 2000;

3) 이미 유럽과 프로이센의 대표적인 비판철학자로 명성이 높던 칸트가 원숙한 철학자의 역량을 담아 저술한 『영원평화론』은 출간되자마자 커다란 관심을 끌며 널리 읽혔던 반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저술된 지 수십 년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치카와에 의해서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그 사본이 발견되었다.

Franceschet 2002; Russett & Oneal 2001; Slaughter 1992; Teson 1998). 냉전 이후 국제평화 이론을 주도하게 된 민주평화론이 민주와 비민주의 구분 그리고 그에 따른 비민주 국가에 대한 개입을 옹호하는 것은 마치 20세기 초반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중국을 침탈하면서 내세웠던 문명 개화국의 자의적 선도 역할을 연상케 한다. 따라서 일본 제국주의의 침탈과 간섭의 허구성과 폭력성을 정면으로 비판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위상을 고려할 때에, 민주평화론과 그 비판론의 사상적 기원인 칸트 평화사상과의 비교는 풍부한 이론적 자원이면서 동시에 안중근 평화사상 해석의 시공간적 확장의 준거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0여년 사이 일련의 안중근 연구자들은 안중근 평화사상을 칸트의 평화 연방제 구상과 공화제, 자유 개념, 국제법의 위상 등을 중심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활발하게 시도하여왔다(마키노 2010; 사사가와 2010; 야마무로 2010; 이태진 2010).

이 논문은 안중근 평화사상을 칸트 평화사상으로 조명하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비판적 독해를 바탕으로 안중근 평화사상의 핵심 논의를 재해석함으로써 그 보편화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한다. 첫째, 안중근 평화사상과 칸트 평화사상의 비교에 있어서 두 사상가의 평화연방제 구상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두 평화구상이 갖는 공통점을 부각하는 데에 치중하는 나머지 안중근과 칸트의 평화연방제가 갖는 차별적 성격은 논의하지 않고 있다. 특히 칸트의 평화연방제가 국가들의 느슨한 연합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반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군사력과 금융, 교육 등에 걸쳐 일정한 권위를 갖는 초국가체제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단지 칸트가 연방제의 성격을 느슨하게 설정하고 회원국들의 자율성을 더 강조하려는 태도, 그리고 안중근이 동양평화회의라는 평화체제에 좀 더 권위를 부여하려는 시각의 차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영원평화론』이 강력하고 권위적인 계몽군주국이었던 프로이센에서 탄생하였다는 점과 『동양평화론』이 제국주의의 각축장이었던 20세기 한반도에서 제출되었다는 시대적 맥락의 차별성을 우리는 아울러 강조하고자 한다.

둘째, 서구의 민주평화론자들은 칸트의 평화사상을 민주평화론의 주장에 껴

4) 마이클 도일이 칸트의 『영원평화론』에 담긴 사상의 일부를 발췌하여 이른바 민주국가들 사이의 평화라는 민주평화론을 제기한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방대한 연구가 경험적인 분석, 이론적인 논쟁의 형식을 통해서 진행되어왔고 이는 냉전 이후 국제정치연구의 거대한 주류를 형성하였다. 방대한 민주평화론에 대한 문헌비평적인 연구만도 적지 않게 축적되어왔으며, 국내의 국제정치학자들도 민주평화론 논쟁을 이어왔다(이혜정 2008).

맞추는 과정에서 중대한 이론적 왜곡과 착취를 감행하였다. 칸트의 평화사상은 이상적인 미래로서의 연방제 구상 못지않게 그 연방제를 구성하는 개별국가들의 자율성과 주권을 강조하였지만 민주평화론자들은 칸트의 주권성과 그에 대한 불간섭 원칙을 의도적으로 외면해왔다(Cavallar 2020; Franceschet 2002). 이 논문은 유사한 이론적 왜곡이 안중근-칸트 평화사상 비교연구에서도 벌어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은 공통적으로 연방제 구상 못지않게 개별국가의 자유의지와 그에 대한 불간섭의 원칙을 평화연방제의 전제이자 결과로서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안중근 평화사상의 보편적 호소력은 연방제 구상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평화를 향한 국가들의 행동규범이자 도덕적 의무로서의 주권과 불간섭 원칙의 강조에도 있다는 점을 해명하고자 한다.

셋째, 안중근이 강조해마지 않은 모든 국가들의 자결에 기초한 평화라는 구상은 제국주의가 각축하던 동아시아 현실 속에서 약소국의 저항논리로서 출발한 것이다. 하지만 안중근 의거로부터 불과 10년 후인 1919년 세계질서의 주도국으로 떠오른 미국의 윌슨은 새로운 국제질서의 원리로 반제국주의와 더불어 민족자결에 기초한 국제평화를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3.1운동을 포함한 수많은 약소국들에 희망과 해방의 이념으로 떠오르게 된다. 따라서 안중근의 자결에 기초한 평화라는 관념은 약소국의 현실에서 출발하여 세계질서의 주도적 평화이념과 공명하였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주변부와 중심부를 가로지르는 사상적 도약이었다는 점을 우리는 규명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이상의 세 가지 논점을 차례대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II. 안중근 평화사상의 보편성 탐색 1: 안중근과 칸트의 평화연방제 비교의 의미와 한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중근 사상을 일국 민족주의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거나 20세기 초반 반제국주의의 맥락에서 바라보던 연구경향을 넘어 보편적인 지평에서 조명하려는 시도들이 주목하는 첫 번째 논점은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제시하는 “동양평화회의”와 칸트의 『영원평화론』에서 제시된 연방제 기반 평화체제의 논리적 동형구조를 강조하는 것이다.

19세기말 20세기 초 동아시아 제국주의 전쟁과 폭압의 시대에 살았던 안중

근(1880-1910)과 역시 전쟁이 끊이지 않던 18세기 후반 유럽 국제체제에서 살았던 칸트(1724-1804)가 국제평화를 향한 대안체제로서 연방제에 다다르게 된 사상사적 경로와 맥락은 물론 상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상가가 공통적으로 주권 국가들의 연합체로서의 연방제를 통해 평화를 구상하였다는 점에 착안한 안중근-칸트 비교연구자들은 두 구상의 유사성을 강조함으로써 『동양평화론』의 보편적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먼저 두 평화연방제 구상의 공통점을 기존 연구들이 어떻게 강조하는지부터 살펴보자. 마키노(2010)와 사사가와(2010), 이태진(2010)의 연구는 칸트 『영원평화론』의 핵심조항으로 흔히 꼽히는 2번째 확정조항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제에 기초해 있어야만 한다”(임마누엘 칸트 2017, 124)와 안중근 동양평화회의의 사상적 수렴에 주목한다. 이들 연구들은 칸트의 평화연방제를 매우 간략히 소개한 후에, 동양평화회의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안중근의 연방제 구상의 수렴 양상을 강조한다. 안중근의 순국 직전 히라이시 뤼순 고등법원장과의 면담 『칭취서』에는 동양평화회의의 구체적 구상이 담겨 있다.

- ① 뤼순을 개방하여 일본, 청, 한국의 군향으로 두고 이 세 나라의 능력 있는 자들을 그 땅에 모아 평화회 같은 모임을 조직하여 세계에 공표하는 것이다.⁵⁾
- ② 재정정리를 위해 동양평화회를 조직해 회원을 모집하고 각 회원에게서 1엔을 회비로 징수하는 것이다. 일본, 청, 한국 국민 수역이 이에 가입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은행을 설립해 각 나라가 공유하는 화폐를 발행하면 반드시 신용을 얻게 되니 금융은 자연스럽게 돌아갈 것이다. 중요한 지역마다 평화지회를 마련하는 동시에 은행 지점을 두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일본의 금융은 비로소 원만해지고 재정도 완전해질 것이다.
- ③ 이상의 방법으로 동양평화는 완전해지지만, 세계열강에 대비하려면 무장을 해야 한다. 일본, 청, 한국 세 나라로부터 각 대표를 파견해 이를 담당하게 하고, 세 나라의 강건한 청년을 모아서 군단을 편성한다. 청년들에게 각각 두 나라 언어를 배우게 하면 어학의 진보에 따라 형제 나라라는 관념이 강고해질 것이다(안중근 2018, 50-51).

한국, 중국, 일본의 시민들이 중심이 되어서 동양평화회의라는 초국가 평화협력체를 만들고 금융 기반까지 갖추자는 안중근의 평화구상은 시민들의 자유와 참여를 공화제 정부의 뼈대로 인식하였던 칸트의 사상과 깊이 공명하는 것이다.

5) 동양평화회의에서 뤼순의 역할은 위트레흐트를 유럽평화연방의 중심도시로 설정하였던 선구적인 평화연방제 구상자인 아베 생 피에르의 논의와 닮아 있다.

따라서 평화 수립과정에서 공화제를 강조하든(사사가와 2010), 시민들의 참여와 윤리를 강조하든(야마무로 2010) 연방제라는 대안의 동질성을 강조하든(마키노 2010; 이태진 2010) 이들 연구자들에게 안중근과 칸트 평화사상의 수렴 양상은 너무나 명확한 것이어서 이는 곧바로 안중근 사상의 보편적 호소력이 이론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강조되었다. 게다가 안중근의 동양평화회의는 연방제의 공동 화폐, 공동은행, 공동군단, 청년들의 어학교육 등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는 칸트의 추상적 연방제 논의를 넘어 칸트의 후예들이 20세기 후반에야 실천하게 된 유럽연합의 여러 제도들(유럽중앙은행, 유로 공동화폐, 유럽연합 교육의 개방)을 선구적으로 구상한 것으로 강조되었다(노명환 2010).

하지만 칸트 평화연방제와 갖는 수렴 양상에 대한 강조만으로 안중근 동양평화회의의 보편성이 온전하게 조명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두 사상가는 공통적으로 평화연방제를 궁극의 대안으로 제시하면서도 연방제의 구체적 구성과 권한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안중근의 동양평화회의가 강한 연방제를 강조하는 반면 칸트는 자유로운 연방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강조점의 차이는 사실 생 피에르가 평화연방제를 처음 제시한 이래로 수많은 평화사상가들이 연방제와 회원국의 관계, 연방제의 권위 등에 대해서 방대한 논쟁을 벌여왔다는 점을 상기해보는다면 자연스러운 것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사사가와의 연구는 안중근의 평화 연방제 논의를 한 차원 끌어올린다. 사사가와는 안중근과 칸트의 평화연방제 구상의 차별성 부각을 통해서 평화연방제의 구조와 권한 및 회원국들과의 관계를 둘러싼 방대한 논쟁 속으로 안중근 평화사상을 끌어들인다.

사사가와는 안중근의 동양평화회의가 공동의 군사와 재정, 시민회원과 각 지부의 설치를 강조하는 데에서 드러나듯이 칸트가 제시했던 개별국가들의 자유로운 연방제(federalism of free states, Völkerbund)⁶⁾보다는 강한 권력을 보유한 체제를 구상하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근대 유럽의 평화 사상가들 사이에서 방대하게 논의되어온 평화 연방제와 주권국가의 관계 설정을 둘러싼 고전적이고 치열한 논의 속으로 안중근 평화사상을 위치 짓는다는 점에서 안중근 사상을 루소, 칸트, 푸펜도르프, 비텔 등이 이어온 평화연방제 논

6) 평화 연방제를 논의할 때에 칸트는 네 가지의 표현을- 연방제(federalism of free states), 국가연합(union of nations Foedus Amphictyonum) 자유연방제(free federation), 연방제 연합(federal union) 두루 섞어서 쓰고 있다. 물론 칸트는 세계정부(world government, völkerstaat)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다(Hinsley 1967, 66). 본 논문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연방제(평화 연방제)를 주로 사용하기로 한다.

의의 맥락 속에서 조명하는 효과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795년 칸트의 『영원평화론』이 평화연방제를 통해서 하나의 이론적 정점을 이루기 이전부터 근대 서구의 평화사상가들은 국제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서 무정부성을 직시하고 초국가적 권위가 부재한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전쟁을 제어하기 위한 구상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모색해왔다. 국제법에 의한 규율, 연방제, 세계정부와 같은 초국가 체제의 모색, 국가의 호전성을 통제하기 위한 구상들이 푸펜도르프, 비텔, 아베 생피에르, 루소, 칸트의 평화사상을 통해 진화해왔다(Clark 1989; Gallie 1978; Hinsley 1967).

방대하게 진행되어온 서구 근대평화사상의 흐름을 간략히 정리하기는 불가능하지만, 거대 논쟁 속에서 칸트의 평화연방제론의 독보적인 위상은 몇 가지 핵심 요소들을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첫째, 칸트가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루소와 마찬가지로 칸트는 국가들이 갖는 호전성과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을 전쟁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식하였다(Hoffman 1968). 둘째, 루소와 칸트가 공통적으로 국제사회의 폭력과 국가들의 전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방제에 주목한 것은 동일하다. 하지만, 루소는 연방제라는 초국가체가 일정한 강제력을 갖지 않으면 무의미하다고 보면서 이의 이론적 해결을 포기하였다면) 칸트는 국가들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이상적 상태로서의 법치와 국제법, 그리고 이에 기초한 평화연방제를 『영원평화론』에서 상세히 논의하였다. 셋째, 칸트의 평화연방제는 국가들 사이의 법적 관계를 기반으로 하되 국가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연방제에 머물고, 강제력을 지닌 세계정부를 거부함으로써 이후 평화사상의 독보적 위치를 점하게 되고 출판 이후 200년이 흐른 1990년대까지도 강력한 영향을 행사하게 되었다(Cavallar 2020; Clark 1989; Hinsley 1967).

비교 논의를 위해 칸트의 평화연방제가 국가의 자율성 보전을 위한 자유연방제를 강조하고 연방제의 정치적 권위 보유를 인정하지 않게 된 이론적 배경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자. 첫째, 칸트는 “정부가 커질수록 법의 실효성은 추락하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전제정은 인간들의 장점을 다 퇴색시키고 무정부상태로 전락한다”고 보았다(Hinsley 1967, 77-78). 또한 칸트는 “국가들 사이에 상호 구속력이 있는 협의에 이르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들이 이미 국내 영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법적 보장”이며 따라서 국가 위에 국가는 불필요하며 세계정부와 같

7) 루소는 이 문제를 인식하기는 하였지만, 국가내의 자유와 법치를 구성하는 『사회계약론』은 작성하였지만, 국가들 간의 평화 계약에 대해서는 끝내 저술을 완성하지 못하였고 생 피에르의 연방제 구상에 대한 발췌와 비평문만이 남아 있다(김용구 2004).

은 초국가적 심급이란 결국 개별국가의 자율성을 위협할 뿐이라고 보았다(폴커 게르하르트 1995, 151). 달리 표현하자면 개별국가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공화국이든 혹은 그 이외의 국가체제이든) 일정하게 자연 상태를 벗어난 존재라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형태로든 내부적으로 법과 질서가 유지되는 국가라는 존재는 그들끼리 자유롭게--즉 다른 국가에 대한 간섭이나 혹은 어떤 초월적인 권위 없이--법에 의한 지배와 평화를 수립해갈 수 있다는 것이 칸트의 주장이다(Lynch 1994, 57).

둘째, 칸트는 국제사회가 법에 의해 규율되는 자유연방제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평화라는 윤리적 목표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목표는 하늘의 별과 같이 쉽게 획득되기는 어려운 이상 상태라고 보았다(Hinsley 1967, 80). 점진적인 접근과 굳건한 희망 그리고 도덕적 의무감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인간은 연방제를 통한 영구평화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 칸트의 접근이었다.⁸⁾

정리해서 말하자면, 칸트의 평화연방제가 국가들의 자율성과 국제법에 의해 지탱되는 평화 구상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안중근은 동양평화회의 구상에서 군사적, 재정적 권한을 갖춘 보다 강력한 권위체로서의 평화 공동체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차별성에 주목한 사사카와의 논의는 여타의 안중근-칸트 비교론들보다 심층적이지만 그의 논의는 여기서 멈춘다.

그렇다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권위와 강제력을 일정 정도 갖추는 평화연방제를 선호하게 된 배경과 논리는 무엇인가? 『동양평화론』이 일정한 권위를 갖춘 초국가체를 구상한 배경은 안중근의 시대적 맥락에서 추출되어야 한다. 안중근의 평화회의의 구상이 제국주의 세력들이 각축하던 동아시아 피압박 국가의 맥락에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 두 가지 초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청일전쟁, 러일전쟁을 거치며 이미 일본의 군사력에 의한 침략과 팽창이 노골화된 시점에서 동아시아의 평화구상은 강한 군사력을 휘두르는 일본을 한국, 중국, 일본의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어떻게 제어하는가의 문제로 이미 구체화되었다는 점이다.

8) 개별국가 내에서 사회계약이 작동하는 원리와 같은 방식으로, 국가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치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를 염원한 것은 루소와 칸트가 공히 가졌던 문제의식이었다. 개별국가의 자유와 국가들 사이의 법적 관계라는 문제 앞에서 루소는 이론적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면, 칸트는 국제사회를 규율하는 국제법의 개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소하고자 노력한 것이 『영원평화론』의 핵심 논지라고 할 수 있다.

1904-5년 러일전쟁과 뒤이은 을미조약의 냉혹한 현실 전개는 그동안 일본 제국주의가 기만적으로 사용해온 동양평화라는 관념이 거대한 허위라는 각성을 동아시아인들에게 불러 일으켰다.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 집필되기 이전부터 일본 제국주의는 군사적 팽창과 물리적 억압을 합리화하고 한국, 중국의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을 호도하기 위한 허위개념으로 동양평화를 집요하게 동원하였다.⁹⁾ 이러한 맥락에서 평화라는 도덕적 목표에만 호소하는 것은 한편으로 공허한 유토피아주의이거나 다른 한편으로 일본의 기만적 논리에 동조하는 것에 불과하였다.¹⁰⁾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평화를 향한 꿈을 놓지 않으면서 동시에 어떤 형태로든 군사 강국의 군사력과 힘을 공동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근대 국제사회의 본질적 딜레마를 직시한 것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이다. 현실 직시와 평화의 꿈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안중근의 평화사상은 한편으로 약육강식의 무정부적 국제관계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동시에 무정부적 상태를 넘어서기 위한 폭력과 군사력의 공동 관리를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구체안이 한, 중, 일 세 나라의 청년들로 구성된 공동의 군단을 편성하자는 방안이다.

아울러 강국의 침략과 폭력의 팽창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반이 금융과 채권이라는 점을 꿰뚫고 있었던 안중근은 동양평화회의라는 공동체가 독자적인 초국가적 금융기반을 갖출 것을 『청취서』에서 제안하고 있다. 공동의 은행, 공동화폐, 공동은행 지점들의 설치를 제안한 것은 안중근이 금융을 공동 관리하는 것이야말로 전쟁 억제와 평화추구의 핵심임을 명확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실제 이토 히로부미의 14가지 죄를 나열하면서, 안중근은 한국의 제일은행권 지폐를 발행하고 마음대로 사용한 죄를 꼽고 있다.

둘째, 안중근이 연방제에 강제력과 권력이 일정 정도 부여되는 평화 공동체를 구상한 또 다른 시대적 맥락은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국제법이 갖는 기만적 위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었다.

9) 일본 동양평화론의 허구성과 안중근의 동양평화 개념을 비교 논구하는 연구로는 이에안(2016)을 들 수 있다.

10) 예컨대 대표적 개화 지식인이었던 유길준조차 1907년 경에는 일본의 허구적 동양평화론을 수용하는 허술한 인식을 내보인다. 1907년 정미7조약 이후 유길준은 “평화광 복지책에 의해 독립과 부강을 이룰 것이며 이로써 동양지역원평화를 보존할 수 있다”고까지 언급함으로써 일본에 의한 보호국체제가 대한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기약한다고 믿는 자기기만에 빠져들었다. 『속종실록』 1권 1 이에안(2016, 55)에서 재인용.

칸트는 공화제적인 방식(즉 인민주권에 기초한 대의정부, 그리고 이들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으로 만들어진 법은 그 자체로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하기에 충분하며 따라서 이러한 공화정이 만드는 법이 국내적으로뿐만 아니라 국가의 대외관계를 규율하게 되면, 법에 의해 지배되는 평화 연방제가 가능하다고 보았다(폴커 게르하르트 1995, 45-49).

반면에 서구 제국주의 세력과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중국 등에 진출하면서 맺은 불평등 조약의 기만적 성격을 목격해온 안중근은 국제법의 기만적이고 폭력적 성격을 꿰뚫어보았다. 『동양평화론』 전감에서 안중근은 “이른바 만국공법이니 엄정중립 등의 설은 최근 외교가의 교활한 술책이니, 말할 것이 못 된다”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있다. 이러한 안중근의 입장은 서구 현실주의의 국제정치관의 효시라고 불릴 수 있는 루소의 국제법이나 조약에 대한 관점과도 상통하지만¹¹⁾ 동시에 서구 제국주의가 동아시아로 폭력적으로 진출하던 시기에 서구의 국제공법이 갖는 유럽 중심주의적이고 폭력적인 성격을 꿰뚫어본 일단의 지식인들과 인식을 같이 하는 것이다. 예컨대 서양에서 소개된 국제공법의 폭력성을 직시하였던 이용무의 『국제공법』(1908), 유성준의 『법학통론』(1907), 정교의 “국제법”(1906) 등은 “서유럽에는 공법의 명(名)은 있으나 공법의 이(理)를 배신한 것이 많다.”¹²⁾고 파악하였고(정교 1906) 이는 안중근의 국제법의 명분과 괴리된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상통한다.

정리하자면, 칸트와 마찬가지로 안중근 역시 평화연방제를 평화의 대안으로 생각하였다. 다만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자유로운 공화국들이 법에 기초해서 대외관계를 규율하는 평화연방제를 구상하였던 칸트와 달리, 안중근의 연방제는 제한적으로나마 공동군대, 공동금융의 기반을 제시함으로써 좀 더 강제적 권위를 갖는 연방제 평화를 지향하였다. 이 점에서 『동양평화론』은 평화연방제 논의의 지적 계보에서는 칸트보다는 루소의 입장에 근접한 것이며(Hassner 1997, 9-10; Hoffman, 1968) 궁극적으로 우리는 국가들의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성향을 제어하는 방안으로서의 평화연방제라는 국제정치사상의 고전적 논의와 안중근의 평화사상이 긴밀하게 맞닿아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11) 루소는 개별국가들의 충돌과 팽창욕이 전쟁의 근본적 원인인 만큼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초국가적 권위의 중요성을 지지하면서도, 약육강식의 세계로서의 국제관계가 법적 관계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규율되리라고는 믿지 않았다(안중근 2021). “국제법은 연약하고 위험한 것이며 그 구속력은 취약하기 마련이고” “국가들 간의 조약이란 단지 국가들 간의 불평등을 영속화할 뿐”(Hoffman 1968, 323)이라는 것이다.

12) 김용구(2008, 184-185)에서 재인용.

Ⅲ. 안중근 평화사상의 보편성 탐색 2: 안중근, 칸트의 평화연방제와 국가주권, 불간섭 원칙

1. 칸트 평화사상의 지워진 절반: 불간섭 원칙과 주권의 독립성

앞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칸트의 평화연방제 구상과의 비교논의를 통해 안중근 평화사상이 갖는 보편적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은 안중근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는 의미 깊은 작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연방제 구상을 중심으로 칸트-안중근 평화사상을 비교하는 것은 안중근 연구 지평 확장의 절반에 불과하다. 심지어 이러한 절반의 비교는 칸트 평화사상과 안중근 평화사상의 왜곡으로 이어질 위험마저 안고 있다¹³⁾(MacMillan 2006).

칸트 평화사상에 대한 왜곡의 핵심은 민주평화론자들이 평화연방제의 전제 조건이자 충분조건인 국가 주권과 불간섭원칙을 의도적으로 무시, 축소하여 왔다는 점이다. 민주평화론자들은 “모든 국가에서 시민적 헌법은 공화주의적이어야 한다(제1확정조항),”(임마누엘 칸트 2017, 115) “국제법은 자유국가의 연방제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2확정조항)”는 확정조항을 칸트 평화의 중핵으로 내세우면서 평화는 오직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명제를 유통시켜왔다. 민주국가들끼리의 평화론은 곧 민주국가와 비민주국가를 구분, 구획하고 평화는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만 가능하다는 “분리된 평화(separate peace)”라는 하부명제로 이어졌다. 또한 분리된 평화론은 심지어 세계평화를 위해 민주국가들이 비민주국가들에 대한 개입하고 민주 개혁을 감행할 수 있다는 거대한 논란거리의 두 번째 하부명제로 이어졌다.

칸트의 평화연방제만을 선택적으로 강조하는 민주평화론자들의 왜곡과는 달리, 칸트의 평화사상 체계는 국제평화의 필연적 전제조건들로서 예비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의 관계는 대등하며 상호보완적이다(Cavallar 2020; Franceschet 2001; Franceschet 2002). 예비조항에서 칸트는 국제평화의 전제조건으로서 “어떤 국가도 상속, 교환, 매매, 증여를 통해 획득될

13) 맥밀란(2006, 53)은 서구 근대 계몽주의와 비판철학의 정점에서 있는 칸트 사상이 갖는 독특한 권위로 인해서, 그의 사상은 이후에 종종 각 시대가 당면한 문제들과 정치적 동기들에 의해서 각색되고 착취되어 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처럼 칸트 사상이 다양한 시대에 요청과 문제들에 의해서 각색되는 현상을 지식사회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의 사례로는 Easley(2004)의 연구를 참고하라.

수 없다(제2예비조항)”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의 헌법과 통치에 무력을 써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제5예비조항)”고 선언하고 있다.¹⁴⁾

달리 말해 칸트 평화사상은 주권성, 불개입 원칙이라는 국가들의 행동규범과 그러한 개별국가들이 자유로이 참여하는 평화연방제라는 이상적 평화체제의 구상이라는 두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칸트는 개별국가들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평화연방제를 평화를 향한 도덕적, 윤리적 목표로 제시하면서 이러한 도덕적 목표의 논리적 전제이자 결과가 바로 개별국가의 주권성과 그에 대한 불개입 원칙이라는 점을 명확히 강조하고 있다¹⁵⁾(Cavallar 2020; Lynch 1994).

문제는 칸트 평화사상과의 비교를 통해 안중근 사상의 지평을 확대하고자 시도하는 최근 연구들 역시 민주평화론이 안고 있던 칸트 왜곡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이다. 마키노(2010), 사사가와(2010), 이태진(2010)의 연구에서 칸트의 평화 예비조항이 천명하는 주권성, 불간섭 원칙에 대한 심층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주권과 불간섭 원칙에 대한 이들의 무관심이 민주평화론자들의 이데올로기적 동기와 동질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연방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칸트 평화사상에 대한 오해일뿐더러 이는 결과적으로 안중근 평화사상에 대한 선택적 축소로 이어진다.

이제부터 우리는 칸트 평화사상에서 국가의 주권성, 불간섭 원칙이 갖는 위상과 안중근 평화사상에서 제시된 국가의 자기결정과 불간섭 원칙의 중심적 위상을 강조하면서 양자를 비교하려 한다.

먼저 칸트 평화사상에서 평화연방제의 전제이자 결과인 주권과 불간섭 원리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본다. 칸트가 18세기말 프로이센에서 평화연방제를 꿈꾸었지만, 여전히 당대 현실은 공화국들 사이의 연방제 평화라는 이상 상태보다는 무정부적인 상태에 가까웠다. 유럽 국가들의 남미, 아시아 등으로의 제국적 팽창뿐만 아니라 유럽국가들 사이에도 전쟁은 일상적이었으며, 국제사회는 힘센 국가들의 팽창, 약소국에 대한 간섭, 폭력 등으로 얼룩져 있었다(오스트리아 왕위계승 전쟁, 7년 전쟁 등).

14) 칸트의 조국 프로이센이 라인강 건너편을 프랑스에게 넘겨주고 폴란드 분할에 참여하는 강대국 정치의 황포를 지켜보며 칸트는 이러한 예비조항을 저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 칸트에게 있어서 법에 의해 지배되는 공화국들의 상호불간섭 원칙이 평화연방제의 논리적 전제인 점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칸트는 동시에 국제평화라는 대외적 조건이 또한 국내적으로 공화제 헌법 유지에 필가결하다고 보았다. 국가간 관계가 폭력과 전쟁으로 얼룩질 때, 대내적으로 공화정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대내적 개혁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이 칸트의 입장이다.

따라서 영원평화라는 이상적 상태로 나아가기 위해 칸트는 국가들의 행동규범이 우선 확립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영원평화론』의 예비조항들은 국가들의 행동 규범과 국가들의 성격을 규정한 것이다(MacMillan 2006, 59). 국제사회에서 국가들의 행동규범으로서의 예비조항 논의는 개별국가들의 자유, 의지, 시민 헌법, 도덕적 의무라는 칸트 철학체계의 핵심 개념들 위에서 있다. 칸트에게 국가는 “그 자신 이외에는 어느 누가 지배해서도 처분해서도 안 되는 인간의 사회”이다(폴커 게르하르트 1995, 87). 이때의 인간이란 국가내의 거주민(시민)이며 이들은 스스로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유 인격체이다. 이들은 오로지 자신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이며 다른 국가의 의지로부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존재이다(폴커 게르하르트 1995, 85). 현대정치학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국가의 주권은 곧 시민들의 자유의지에 따른 통치라는 인민주권과 법치의 결정체라는 두 축에 서있는 것이다.

칸트는 국가들은 한편으로 자유 인격체이면서 동시에 도덕적 인격체로서 다른 국가들에 대해 상호성의 원칙에 따라서 도덕적 의무를 지고 있다고 강조한다. 이때의 도덕적 의무는 세 가지인데, 첫째, 다른 국가들을 공격하지 않는 전쟁방지의 의무(무력을 써서 간섭해서는 안된다; 예비조항), 둘째 다른 국가들의 헌법과 통치에 간섭하지 않을 의무, 세 번째 다른 국가들과의 상업(즉 무역)을 강요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도덕적 의무는 칸트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국가체제로서의 공화국뿐만 아니라 비공화국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는 국제사회의 규범이자 행동준칙이며 이로써 칸트는 공화국들의 도덕적 의무와 비공화국들의 도덕적 의무, 강국과 약소국들의 도덕과 전쟁 회피가 상호 연관되어 있음을 날카롭게 파헤쳤다고 할 수 있다(MacMillan 2006, 70).

장기적이고 멀리 있는 이상상태로서의 국제사회 법치(평화 연방제)가 수립되기 전의 일종의 준법치(Semi-ruling of public law) 단계에서 불간섭과 국가주권의 원칙을 통해 무정부적 국제사회는 좀 더 성숙하고 규칙기반의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칸트 예비조항의 핵심이다. 이처럼 예비조항에서 강조하는 불간섭의 국제사회와 주권, 국가들 사이의 신뢰 등은 결국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자유롭고 다원적인 국제사회의 모습에 부합하는 내용이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칸트의 평화사상은 민주평화론자의 축소, 왜곡과는 달리 국가의 주권, 불간섭 원칙과 평화연방제라는 일견 모순적인 두 길을 통합하려 시도한 근대 평화사상의 결정체이다. 국가들이 폭력적으로 각축하는 현실과 평화라는 도덕적 이상사이의 긴장을 직시하고 양자의 긴장을 해소하려 한 것이

『영원평화론』의 예비조항과 확정조항의 대등한 관계이다. 이러한 현실과 이상, 현실과 도덕 사이의 모순과 갈등을 20세기 초반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직시했던 것이 이제부터 우리가 검토하려는 안중근의 국가들의 독립에 기초한 동양평화이다.

2. 안중근의 평화공동체의 논리적 전제로서 불간섭, 국가주권과 도덕

평화로운 세계를 향한 국가들의 행동규범으로서 칸트가 제시한 불간섭 원칙, 주권국가의 독립, 도덕적 의무는 20세기 초반 동아시아에서 안중근의 평화사상을 통해 놀랍게 재현된다. 제국주의 강국들의 폭력이 난무하던 시기에 안중근은 동양평화를 위해서는 국가간 불간섭, 자유 의지로서의 주권과 도덕적 의무가 필수 불가결한 조건임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첫째, 안중근은 루소와 칸트 등이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던 국제사회의 무정부성이 20세기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폭력으로 구체화하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동양평화론』 서문은 이렇게 시작된다.

“지금 세계는 동서로 나뉘어져 있고 인종도 각각 달라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일상 생활에서 실용기계 연구에 농업이나 상업보다 더욱 열중하고 있다. 그러나 새 발명인 전기포, 비행선, 침수정은 모두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물을 해치는 기계이다. 청년들을 훈련시켜 전쟁터에 몰아넣어 수없는 귀중한 생명들을 희생물처럼 버려...”(안중근 2021, 123)¹⁶⁾

이러한 무정부적 폭력은 도덕과 문명의 상실로서 이해된다. “문명이란 동서양의 현우,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각자 천부의 성을 지키며 도덕을 숭상하고 서로 다투는 것이 없는 마음으로 안토낙업하여 함께 태평을 누리는데”(안중근 2021, 69) 것인데 문명은 서구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과 침략으로 무너졌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가 주도한 을사 5조약과 정미 7조약 등으로 국가 간 도덕과 문명이 무너지고 폭력적 간섭이 자행되어 평화가 무너진 것으로 본다. 이토가 “위로 임금을 속이고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며 이웃

16) 위 인용은 안중근 자서전에 부록으로 실린 『동양평화론』에서 가져온 것이다. 『동양평화론』의 여러 판본마다 현대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표현상의 차이들이 폭넓게 존재한다.

나라와 의를 끊고 세계의 신의를 저버리니 그야말로 하늘을 반역하는” 죄를 지었다고 본다. 무력으로 다른 나라의 헌법과 통치에 간섭하는 이토의 죄는 『청취서』에서 안중근이 밝힌 이토의 죄 14가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 0. 5조약과 7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죄
- 0. 정권을 강제로 빼앗은 죄
- 0. 철도, 광산, 산림, 천택을 마음대로 빼앗은 죄
- 0. 제일은행권 지폐를 발행 마음대로 사용한 죄
- 0. 군대를 해산시킨 죄
- 0. 교육을 방해하고 신문 읽는 걸 금지시킨 죄
- 0. 교과서를 압수하여 불태워 버린 죄

결국 폭력적 간섭으로 “동양평화를 깨뜨린 죄”(이토의 죄 14번째)가 성립되는 것이다.

둘째, 도덕의 붕괴와 더불어 무력간섭과 침탈이 평화를 깨뜨린 바에서 보듯이, 안중근은 평화는 국가의 자유 의지와 주권의 확립에 기초해 있다고 밝힌다. “동양평화란 중국, 일본, 한국, 삼, 미얀마 등 아시아주 각 나라가 모두 자주독립을 누리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을 평화라고 본다(사사가와 2010, 437). “그야말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은 만사가 망하는 근본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만사가 흥하는 근본이다... 따라서 스스로 강한 힘으로 국권을 회복해야만 전전한 독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안중근 2021, 73).

셋째, 칸트와 마찬가지로 안중근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평화는 불간섭, 자주성의 원칙과 더불어 도덕적 의무를 통해서 평화가 유지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세상이 제국주의 폭력과 간섭으로 물들기 이전 한국인들은 도덕으로 평화에 기여해왔다는 점을 안중근은 강조한다. “한국은 사천년래 무를 일삼는 나라가 아니고 문필로 세워온 나라이며” 다른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인약의 민족”이라는 것이다(안중근 2018, 46).¹⁷⁾ 또한 인류의 일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인약의 윤리를 견지할 때에 평화를 추구하는 시민적 주체가 될 수 있음을 이마무로는 강조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안중근의 평화사상은 “실패한 이상주의” “비현실적 초국가주의”

17) 이와 관련하여 야마무로(2010, 380)의 논의는 안중근이 내세운 인약의 윤리가 두 가지 관점에서 국제평화로 연결되는 점을 각별히 강조하고 있다. 우선 인약이란 “어질지만 힘이 없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마찬가지로 인약으로 바꿈으로써 평화에 기여할 잠재력을 가진다고 본다.

로 단순화될 수 없다. 동양평화론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써 국가들의 무정부적 폭력과 간섭을 적시하고, 아울러 평화로 나아가는 도덕적 대안(인약의 윤리)과 실천적 대안(권위를 가진 연방체로서의 동양평화회의)을 아울러 제시하고 있다. 달리 말해 칸트의 평화사상이 역사와 도덕, 국제정치 현실과 공화제 범치의 이상이라는 다양한 차원들을 결합하려는 거대한 사상적 기획이었듯이(Lynch 1994, 47) 안중근의 평화사상 역시 도덕, 윤리, 현실비판 등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사상적 기획이었다는 점에서 보편성을 지향한다고 말할 수 있다.

IV. 로컬과 보편의 변증법: 안중근의 ‘독립에 기초한 평화’와 윌슨주의

지금까지 우리는 평화공동체와 주권의 불간섭이라는 두 차원을 중심으로 안중근과 칸트 평화사상의 공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냉전 이후 국제정치 이론논쟁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서구 근대 평화사상의 한 정점으로 이해되는 칸트와의 비교는 보편성을 향한 합리적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와의 비교검토는 다소 추상적이기도 하다. 18세기 후반 서구 근대국가체제와 20세기 초반 동아시아 제국주의 시대라는 맥락상의 차이를 고려한다면 이러한 비교는 추상성의 이점과 아울러 구체성의 한계를 갖는 것도 사실이다.

칸트 평화사상과의 추상적 비교를 보완하는 길은 1919년을 전후로 세계 평화사상의 주류로 떠올랐던 윌슨주의와 안중근 평화사상의 의미를 비교 검토하는 것이다. 1차 대전의 결과로 유럽의 제국주의 질서가 붕괴되고 새로운 강대국으로 떠오른 미국이 제시한 평화질서는 모든 국가(강대국, 약소국, 1차 대전 참전국, 비참전국을 망라한)와 민족의 자결권에 기초한 국제평화였다(아담 투즈 2014, 438-459; Ninkovich 1999; Smith 2018).¹⁸⁾ 달리 말하자면, 안중근의 “국가들의 독립이 곧 평화”라는 언명은 윌슨주의라는 평화구상의 새로운 주류가 등장하기에 앞서서 그 사상의 핵심을 선취한 것이다. 시간상의 선취일 뿐만 아

18) 물론 윌슨의 민족자결에 기초한 평화라는 평화이념은 1919년 당시에는 미국 내에서도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미온적인 지지를 받았을 뿐이고 미국은 끝내 윌슨주의에 기초한 국제연맹에 가입조차 거부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윌슨의 평화이념은 당대 전세계 수많은 피압박 민족들에게 거대한 희망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래 동안 국제평화의 이념으로서 실천적 영향을 발휘하고 있다.

나라 안중근의 평화 구상은 세계 권력정치의 중심부였던 유럽이나 미국이 아닌 피압박 국가의 경험과 사상적 고투에서 탄생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심장하다. 월슨주의가 1919년 한국의 3.1운동뿐만 아니라 이집트, 중국, 폴란드 등 수많은 피압박국가들의 독립운동을 자극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Manela 2007) 안중근의 ‘독립이 곧 동양평화’라는 언명은 일찍이 피압박국가의 현실로부터 추출된 사상으로서 그 같은 보편적 호소력의 지역적 원천을 구성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월슨주의와의 비교 검토는 안중근 평화사상의 보편 가능성을 좀 더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 부각한다고 할 수 있다.

비교는 두 측면으로 구성된다. 첫째, ‘독립이 곧 평화’라는 안중근의 언명이 당시 동아시아 지역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논의하고 둘째, 안중근 하얼빈 의거 10년 후에 등장한 월슨주의와의 사상적 공명을 검토하는 것이다.

먼저 안중근 시대의 동아시아 지역현실의 맥락부터 검토해보자. 불간섭과 주권의 독립에 기초한 평화라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의 의미는 기존 일본 제국주의가 기만적으로 내세우던 허구의 이데올로기로서의 동양평화론을 비판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19세기 후반 서구 제국주의의 진출과 더불어 동아시아를 규율하던 중국 중심의 사대교린 질서는 와해되고 이른바 만국공법 체제가 서서히 고통스럽게나마 동아시아에 자리 잡게 되었다(Duus 1998; Kim 1980). 공법상으로 각국이 동등하고 독립적이라는 관념이 소개되기는 하였지만, 국제정치의 현실은 안중근이 묘사한 대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풍진시대였다. 1895년의 청일전쟁은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둘러싼 구권력 청나라와 신권력 일본이 군사적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으며, 러일전쟁 역시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벌어진 충돌이었다.

일본이 조선의 독립과 동양평화를 기만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청일전쟁을 전후한 시기부터였다. 만국공법 체제하에서 청국의 조선 출병을 견제하고 조선의 독립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일본군을 출병시키면서 내세운 일본의 논리는 조선독립과 그를 기반으로 동양의 평화를 유지하고 서구 열강을 견제한다는 것이었다(이예안 2016).

이른바 서구의 진출과 중국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지키고 이것이 곧 동양평화라는 위장된 제국주의 논리는 1895-1905년 사이에 일본침략의 논리에 편승하는 부역 지식인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성향의 지식인들과 신문들까지도 포함하여 조선의 사상적 자기분열을 파고들며 조선의 방향을 부채질하였다(앙드레 슈미드 2007, 229-243). 당대 한국의 지식인들은 동양과 서양의 대결이라는 인종주의적 호소와 그 대안의 하나로서 범아시아주의를 통한 평화에

경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신기욱 2009; 앙드레 슈미드 2007, 157-159). 또한 이들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선도적으로 문명개화를 이룬 국가이고 따라서 일본이 조선, 중국, 일본의 삼국협력을 이끌며 동양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순진한 기대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¹⁹⁾

일본 제국주의의 위장된 논리와 조선 지식인들의 사상적 자기분열이 냉혹한 국제정치 현실에 의해서 논파되는 계기는 러일전쟁 직후 일본이 조선 조정에 강요했던 을미5조약이었다. 을미조약으로 인해 문명개화와 일본의 선도, 동양평화라는 개념적 연쇄가 일본 제국주의를 분식하는 허위의 논리였음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일본 제국주의의 위장된 평화논리를 실천과 사상 두 측면에서 정면으로 폭로한 것이 바로 안중근의 평화사상이다. 실천의 측면에서 조선 인민이 일본을 믿고 동양평화라는 대의를 위해 러일전쟁에서 일본을 지원하였지만, “일본은 신의를 저버리고 자국에 유리한 조약을 만들어 이웃나라를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니 이에 대한 의전으로 대항하겠다는 것이 바로 안중근의 이토 살해이다(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1999, 58).

안중근은 허위의 동양평화를 실천적으로 폭로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순 감옥에서의 저술을 통해 일본의 위장된 동양평화론을 정면으로 비판한다. 우리가 앞에서 논의하였듯이 안중근의 민족국가의 독립과 그에 기반한 동양평화회의는 20세기 초반 제국주의의 폭력 앞에 노출된 아시아 약소국의 고통과 평화의 꿈을 변증법적으로 결합하려는 사상적 모색이었다.

아시아의 피압박국에서 탄생한 안중근의 평화사상은 10년 만에 세계질서의 중심부에서 공명을 맞게 된다. 1차 대전 종결 이후 세계질서를 주도하는 원리를 모색하던 미국이 내놓은 윌슨주의는 바로 안중근이 1910년에 내놓았던 제국주의 비판, 민족자결과 독립, 그리고 그에 기초한 평화라는 관념을 핵심으로 하여 전세계에 전파된다.

윌슨주의와 안중근 평화사상의 첫 번째 공명은 반제국주의이다. 1차 대전을 통해 경제적, 군사적 주도국으로 떠오른 미국의 윌슨은 유럽의 국제정치와 전지

19) 동양과 서양의 대결이라는 관점의 인종주의, 그리고 이러한 대결에서 선진적으로 문명화한 일본의 선도적 역할이라는 미혹된 관념들로부터 안중근이 전적으로 자유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동양평화론』이나 자서전에서 이러한 관념들에 대한 안중근의 언급은 적지 않게 발견된다. 다만 김경일(2009, 208-210)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러한 시대의 사상적 방향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지만 동시에 안중근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논리와 국제평화, 국가의 자주와 평화의 딜레마에 대한 사상적 해소로 나아갔다는 점을 평가하고 주목해야 한다.

구적 팽창을 좌우하던 영국, 프랑스의 제국주의를 전면적으로 부정한다. 전후 질서는 강대국의 이익이나 권력중심의 국제질서로부터 탈피하여 “모든 현대 국가들의 시민 개인들을 규율하는 공통의 법에 대한 존중과 명예”에 기초해야 하며 이때의 모든 시민들이란(Manela 2007, 44) “전쟁 참여국들의 시민뿐만 아니라 억압받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모든 인종,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는 원칙이 강조되었다(Manela 2007, 122).

두 번째 공명의 초점은 민족자결이다. 월슨주의의 정수라 불리는 저 유명한 “14개조”의 제5항은 “주권과 피압박민들의 이익은 자유롭게, 열린 마음으로, 절대적으로 공정한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천명한 데에 이어서 월슨은 1918년 2월 연설에서는 마침내 모든 나라의 시민들의 “자결의 원칙이 곧 모든 행동의 궁극적 원칙”이라는 점을 강조한다(Manela 2007, 41).

새로운 세계의 질서는 제국주의 폭력과 피압박 민족들의 고통으로 얼룩진 질서가 아니라 모든 국가들의 인민주권과 국가들의 평등이라는 양대 원칙 위에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Manela 2007, 35). 이제 평화는 제국주의 폭력과 그를 문명이나 개화라는 말로 포장한 허위의 평화가 아니라 민족자결에 기초한 국제평화로 나아가게 되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안중근 평화사상의 핵심 개념들인 국가의 자주와 독립, 국가들의 신의와 도덕(인)에 기반한 평화의 제도화(동양평화회의) 등이 월슨주의의 핵심 교리들과 명확히 일치한다는 데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월슨의 민족자결에 기반한 평화가 기존의 제국주의 질서를 전면적으로 극복하는 의미를 가지면서도 그러한 사상의 대체는 과거 제국주의의 중심(영국, 프랑스)을 대체하는 새로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중심(미국)에서 성립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안중근 평화사상은 20세기 전반기 보편 평화사상의 지위를 갖게 되는 ‘민족자결에 기초한 평화’를 제국주의 폭력의 희생자이자 문명개화론의 주변부의 경험으로부터 도출하였다는 데에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V. 결 론

이 논문은 최근 안중근의 『동양평화론』과 칸트의 『영원평화론』을 비교 논구하는 기존의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다음의 이론적 쟁점들을 새로이 제시하였다. 첫째, 동양평화회의와 칸트의 평화연방제의 비교검토는 안중근

연구를 확장한다는 의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두 사상가의 평화사상을 평화연방제라는 대안에만 국한하는 한계를 갖는다. 연방제라는 평화 대안의 공통성 이외에도 안중근과 칸트는 국제평화의 전제로서 개별국가의 독립성과 불간섭원칙을 공유하였다는 점을 이 논문은 새롭게 강조하였다. 달리 말해 안중근 평화사상은 한편으로 일본 제국주의가 내세운 기만적인 동양평화를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당대 한국의 지식인들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였으며 동시에 개별국가들의 독립과 독립국들 간의 국제평화라는 근대 국제사회의 딜레마를 정면으로 직시하고 그 딜레마를 해소하려는 한국의 근대국제정치관의 한 뿌리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²⁰⁾

둘째, 이처럼 독립과 자주에 기초한 국제평화라는 안중근 평화사상의 핵심은 『동양평화론』 저술 10년 후에 세계정세의 급변과 더불어 등장한 월슨주의라는 지배적 평화사상과도 공명하게 된다는 점을 이 논문은 새로이 강조하였다. 흔히 월슨주의가 3.1 운동을 포함한 한국의 독립운동에 미친 영향 등이 폭넓게 논의되어 왔지만, 독립에 기초한 평화라는 안중근의 관념은 월슨주의를 시간적으로 선취할 뿐만 아니라 피압박 국가의 현실로부터 도출된 사상이라는 점에서 민족자결에 기초한 평화라는 사상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일방적으로 도입되는 사상이 아니었음을 증언한다고 할 수 있다.

국가독립과 국제평화의 딜레마를 직시하고 약소국의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자주독립에 기초한 국제평화를 강조하였다는 면에서 안중근의 사상은 민족주의라는 틀에 한정될 수 없으며 또한 이상적 평화주의(또는 코스모폴리타니즘)에 국한될 수도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달리 말하자면, 독립운동과 민족주의를 넘어 안중근의 사상은 근대 국제정치의 근원적 딜레마에 대한 사상적 모색이었다고 요약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의 한 방향은 서구의 근대평화연구의 정점이었던 칸트 평화사상과의 비교를 넘어,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의 피압박 국가들에서 시도되었던 자주독립과 평화의 딜레마에 대한 사상적 노력들과 비교 검토를 시도하는 것이다.

20) 안중근 사후 1919년 3.1운동 시기를 전후로 독립과 세계평화의 긴장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드문 연구로는 장인성(2021)의 연구를 참고하라.

참고문헌

국문 자료

- 강동국. 2009. “동아시아의 관점에서 본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안중근의사 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서울: 경인문화사, 399-440.
- 권혁범. 2014. 『민족주의는 최악인가?』. 서울: 아로파.
- 김경일. 2009.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본 안중근과 동양평화론.” 『정신문화연구』 32(4), 193-219.
- 김용구. 2004. 『장자크 루소와 국제정치』. 서울: 원.
- _____. 2008. 『만국공법』. 서울: 소화.
- 노명환. 2010. “유럽통합사상과 역사에 비추어본 세계사적 의의.” 『국제지역연구』 20(4), 181-205.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편. 1999. 『안중근 의사 자료집』. 서울: 국학자료원.
- 마키노 에이지. 2010. “안중근 의사와 동양평화론의 현대적 의의.” 이태진, 안중근 하얼빈학회 편.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서울: 지식사업사, 387-418.
- 사사가와 노리가쓰. 2010. “안중근의 재판.” 이태진, 안중근 하얼빈학회 편.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서울: 지식산업사, 419-463.
- 신기욱. 2009. 『한국 민족주의의 계보와 정치』. 서울: 창비.
- 신운용. 2009.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연구와 실천을 위한 방안.” 안중근 기념사업회 편. 『안중근과 그 시대』. 서울: 경인문화사, 497-510.
- 아담 투즈 저, 조행복 역. 2014. 『대격변』. 서울: 아카넷.
- 안중근. 2018. 『동양평화론』. 서울: 선택.
- _____. 2021. 『안중근 자서전』. 서울: 범우사.
- 양드레 슈미드 저, 정여울 역. 2007. 『제국 그 사이의 한국, 1895-1919』. 서울: 후마니티스.
- 야마무로 신이치. 2010. “미완의 동양평화.” 이태진, 안중근 하얼빈학회 편.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서울: 지식산업사, 353-386.
- 이예안. 2016. “영원평화의 기대지평과 근대 한국.” 『개념과 소통』 17(2), 39-79.
- 이태진. 2010.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재조명.” 이태진, 안중근 하얼빈학회 편. 『영원히 타오르는 불꽃』. 서울: 지식산업사, 327-352.

- 이혜정. 2008. “민주평화론의 역설.”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9(2), 130-153.
- 임마누엘 칸트 저, 백종현 역. 2017. 『영원한 평화』. 서울: 아카넷.
- 임지현. 2020.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서울: 소나무.
- 장인성. 2021. “근대 동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한다.” 이경미 편. 『근대 동아시아 평화사상』.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5-44.
- 정 교. 1906. “국제법.” 『소년 한반도』 1, 1-8.
- 조 광. 2020. “안중근에 관한 최근 연구의 현황과 과제(2010-2019).” 신효승 편. 『3.1운동과 상해임시정부의 재조명III』. 서울: 동북아역사재단, 11-37.
- 폴커 게르하르트 저, 김종기 역. 1995. 『(다시 읽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서울: 백산.
- 현광호. 2013. “안중근 동양평화론의 현재와 과거.”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5, 93-132.

영문 자료

- Anastassova-Cornelis, Elena & Frans-Paul Putten. 2016. *Changing Security Dynamics in East Asia*. London: Palgrave MacMillan.
- Cavallar, Georg. 2020. *Kant 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Right*. Cardiff, UK: University of Wales Press.
- Clark, Ian. 1989. *The Hierarchy of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uus, Peter. 1998. *The Abacus and the Sword The Japanese Penetration of Korea, 1895-191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asley, Eric. 2004. *The War over Perpetual Peace*.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Franceschet, Antonio. 2001. “Sovereignty and freedom: Immanuel Kant’s liberal internationalist legacy.”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27, 209-228.
- _____. 2002. “One Powerful and Enlightened Nation.” in *Classical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edited by Jans Beate, 73-95.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Fröhlich, Stefan & Howard Loewen. 2018. *Changing East Asian Security Landscape*. Wiesbaden, Germany: Springer.

- Fox, Gregory H. & Brad R. Roth. 2000. *Democratic Governance and International Law*.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Gallie, W. B. 1978. *Philosophers of War and Pe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ssner, Pierre. 1997. "Rousseau and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Rousseau's Legacy*, edited by Clifford Owen and Nathan Tarcov, 200-219.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nsley, F. H. 1967. *Power and Pursuit of Pea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offmann, Stanley. 1968. "Rousseau on War and Pea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7(2), 317-333.
- Kang, David. 2017. *American Grand Strategy and East Asian Security in the 21st Century*.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m, Kihuk. 1980. *The Last Phase of the East Asian World Order: Korea, Japan, and the Chinese Empire, 1860-1882*.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ynch, Cecilia. 1994. "Kant, the Republican Peace and Moral Guidance in International Law." *Ethics and International Affairs* 8, 39-58.
- Manela, Erez. 2007. *The Wilsonian Moment: Self-Determination and the International Origins of Anticolonial Nationalism*.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MacMillan, John. 2006. "Immanuel Kant and the Democratic Peace." in *Classical Theory in International Relations*, edited by Jahn Beate, 52-7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inkovich Frank. 1999. *The Wilsonian Century: U.S. Foreign Policy Since 190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ussett, Bruce & John Oneal. 2001. *Triangulating peace: Democracy,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ew York: W. W. Norton.
- Slaughter, Anne-Marie. 1992. "Law Among Liberal States: Liberal Internationalism and the Act of State Doctrine." *Columbia Law Review* 92(8), 1907-1996.

- Smith, Leonard. 2018. *Sovereignty at the Paris Peace Conference of 191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Teson, Fernando. 1998. *A Philosophy of International Law*. Boulder, CO: Westview Press.

Abstract

Ahn Joonggeun's Thoughts on Peace and Kant: Comparing Kant's Perpetual Peace with Ahn's Oriental Peace

Hoon Jaung ■ ChungAng University

This article attempts to critically revisit such comparative works which are in vogue in recent years. First, this article argues that extant studies' comparative focus on Kant's peace federation with Ahn's Oriental peace conference elaborate only half of their peace theory. It is a reasonable attempt to compare Kant's emphasis on free nations' membership of federation with Ahn's peace conference with a certain degree of authority on the supranational peace conference.

Second, extant comparative studies have neglected the other crucial dimension of Kant and Ahn's peace thought, that is, the centrality of national states' sovereignty and non-intervention principle. The so-called democratic peace theorists, who claimed their inheritance of Kantian legacy and Ahn'-Kant comparativists shared such intellectual negligence. Contrary to this theoretical distortion, both Kant and Ahn have placed prominent meaning to the principle of sovereignty and non-intervention. They both believed that such principles were not only preconditions but also consequences of peace federation. In this sense, this article reveals key intellectual loopholes and distortion among extant studies on Kantian legacy and Ahn's peace thought.

Key Words: Ahn Joonggeun, Kant, Peace-federation, state sovereignty, non-intervention